25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노랗게 말라죽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도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 비상

3만2000여ha 소나무 반출금지
예방주사·고사목 베기 등 방제 총력
전남도 지난해 2만1087그루 피해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한 야산에서는 누렇게 말라버린 소나무 한 그루가 죽어가고 있었다.

치사율 100%로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였다. 취재진이 2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림잡아 높이 10여m는 돼 보이는 소나무였지만, 잎이 말라 버린 탓에 앙상한 줄기만 드러내고 있었다. 고사한 소나무는 생기를 품은 주변의 푸른 소나무와 강렬하게 대비됐다.

같은 날 광주시 광산구 용동의 복룡산에서도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솔잎이 온통 누렇게 말라 죽어버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소나무가 보였다.

광주·전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 발생해 관계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무등산국립공원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병이 발생한 광주지역 4개 자치구 3만 2552ha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구 서창·치평·금호·풍암동 3075ha, 남구 송암·대촌동 4230ha, 북구 건국·동림·양산·신용·일곡동 4107ha, 광산구 임곡·하남·본량·삼도·우산·신흥·어룡·동곡·평·첨단·비아·수완·신창·신가동 2만 1140ha 등이다.

지난 2023년께부터 감염목(감염된 나무)이 급증세를 보이더니 3년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4년) 광주시 재선충병 피해 소나무 수는 6424그루로, 광산구가 98.3%인 6316그루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북구 50그루, 서구 47그루, 남구 11그루 순이다.

전년도 5월부터 당해 4월까지 기준으로 2020년 61그루, 2021년 280그루, 2022년 764그루로 점차 늘어나더니 2023년 3520그루, 2024년 4월까지 1739그루로 폭증했다.

지난해 4월 이후로도 북구 월출동·본촌동·일곡동 등 205그루, 서구 서창동 1그루, 남구 원산동·이장동 등 19그루, 광산구 삼도동 등 1200여그루 등 1400여그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심 곳곳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앞 소나무도 재선충병에 말라죽어 제거했다. 법원 안 나머지 소나무에는 방제를 위해 영양제 등의 링거를 꽂아뒀다.

광주시 각 자치구는 나무 예방주사를 놓거나 고사목을 베는 등 방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3월 중 1억 1400만원을 들여 서창동 송학산 일대 소나무에 합제나무주사를 투여할 계획이며, 남구는 2억 1900만원을 들여 원산동, 대촌동 일대에서 벌채, 위험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주입 등 방제사업을 한다.

북구와 광산구 감염목과 고사목을 베어내고 합제나무주사를 투여하는 등 방제 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동구는 아직 신고 접수된 감염목이 없는 만큼 광주시 북구, 화순군의 경계 지역 등 산림에서 예찰 활동을 할 방침이다.

재선충병은 초반 방제작업에 실패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탓에 자치구 담당자들은 확산을 막는 데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고사목을 벌목하거나 예방주사를 놓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자체 확산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이상기후로 벌레가 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번식 속도가 폭증하는 등 문제도 겹쳐 전국이 '비상 사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서는 전년도 5월부터 당해 4월까지 기준 2022년 2만 1067그루, 2023년 2만 5662그루, 2024년 2만 1087그루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수(1만 969그루), 광양(6137그루), 장성(2368그루), 순천(1284그루)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선충병이 이미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나간 탓에 인간의 '감기'와 비슷하게 뿌리뽑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우려한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연구원장은 "감염목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빠르게 조치하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피해 범위가 늘어나므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발생 이력이 없던 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발견해 신고할 시 산림청에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도 주고 있으니, 산에서 죽은 소나무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산림청이나 지자체 등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속에 있는 크기 1㎜ 내외의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일으키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 100%로 회복이 불가능해 벌목을 할 수 밖에 없다. 1쌍의 재선충이 20여일간 20만 마리로 번식하는 등 소나무 내에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소나무의 수분 이동통로(수관)를 막아버리면 나무가 붉게 변하며 말라 죽는다.

'전두환 흉내' 중국 틱톡커, 광주 조롱 영상 논란

오월 관계자들, 자성 촉구

중국인 틱톡커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전두환씨 흉내를 내며 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다.

최근 중국의 한 틱톡커는 SNS '틱톡'에 '광주, 나는 폭설과 함께 돌아오는 전두환이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는 전씨와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점퍼와 군화 차림에 빨간색 몽둥이를 든 남성이 전씨를 흉내내며 광주국립박물관, 광주송정역 등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왔다.

오월 관계자들은 "오월 영령을 조롱하는 무례한 일"이라며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뼈아픈 역사를 헤집어놓는 행위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시민들을 존중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 사진을 들고 천안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우리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5·18기념재단은 중국인 틱톡커에 대해서는 외국 사안인데다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워 별다른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중국의 지난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중국 산둥 타이산과 광주FC의 경기에서 일부 중국 관중들이 전씨의 사진을 펼쳐 들어 논란을 불렀다.

5·18기념재단은 이후 광주FC에게 "한국축구협회를 통해서 중국 축구 협회에 '5·18 아픈 역사와 정치적 사안 등을 스포츠 경기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생, 내란 옹호 규탄 기자회견 '맞불'

27일 5·18 광장서

전남대 학생들이 전남대 5·18 광장(옛 봉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반발해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2·27 긴급 전남대 행동'(이하 전남대 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1시와 4시 전남대 후문과 전남대 5·18 광장(봉지)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후 1시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4시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진행한다.

전남대 행동은 같은 날 전남대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집회가 예정됨에 따라 맞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전남대인' 단체가 윤 대통령 주장을 따라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2월 24일 광주일보 7면>을 할 예정이며, 앞서 오후 2시에는 보수유튜버가 전남대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행동은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명백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남대에서 열리는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과 극우유튜버들의 방문 등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전남대인'은 당초 전남대 5·18 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전남대로부터 광장 사용 승인을 거절당해 전남대 후문 스포츠센터 앞 거리로 장소를 옮겼다.

/김다인 기자 kdi@

"현관문 수리비 대신 내겠다" 소방서에 기부 문의 쇄도

17건 접수…광주소방본부 "예산에서 천만원 지원"

화재 진압 도중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에 주민들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한 건을 두고 "대신 갚겠다"는 기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5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소방에는 이날까지 이틀간 총 17건의 기부 문의가 접수됐다.

직접 소방서를 찾아온 경우는 2건으로, 50대 남성은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남성도 수리비용을 내겠다고 소방서를 찾았다.

친구들과 성금을 기부하겠다는 학생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소방은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부는 받지 않았다. 수리비용은 광주소방본부가 확보한 1000만원의 예산에서 지원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관이 책임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보상을 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소방청이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자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